

野 “호재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총공세

한국당, 특검추진 당론 채택
야 3당, 김·경 항의 방문
김경수 “무책임 보도 유감”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댓글조작 사건 의혹을 질타하면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한 반면 여권은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면서 방어에 집중했다. 특히, 여야는 댓글 조작 의혹이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댓글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와 우모씨를 당에서 제명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 1인에 대해서도 신원과 당적이 확인되는 즉시 제명할 방침이다. 또 ‘드루킹사건진상조사단’을 설치해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추미에 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수사당국은 인터넷 여론조작세력의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당원이란 이유로 배후설이 제기된 것과 관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불법여론조작사건의 피해자다”면서 “여론조작 피해자가 배후일 수 있는 나”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발 빠른 조치는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6·1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댓글 조작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외무성 출장본



‘민주당 댓글조작’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과 친문 핵심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으로 번진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특검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김기식 의원과 민주당 댓글공작 여론조작과 관련된 국회 차원에서 특검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7일 특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과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댓글 사건을 두고 보수정권을 누구보다 거세게 비판했던 민주당을 흔들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내에 댓글조작 대

응 TF를 구성한 바른미래당 역시 댓글 조작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비슷하다고 지적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평화당도 법무부를 상대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면서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또 검찰과 경찰을 방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과 바른미래당 댓글조작 대응 TF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을 각각 항의 방문했고 평화당 역시 검찰 출신의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한편, 댓글 조작 의혹 파문에 휩싸인 민

주당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언론들을 통해 흘러나오고 무책임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는 일부 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명백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적극적 방어와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댓글조작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어 경남지사 선거는 물론 전체적인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3당 “개헌·선거제 단일안 마련”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공동행동안 합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짝 맞춘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야3당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헌연대는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야 3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과 간사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야3당

개헌연대 공동행동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며 “국회 주도의 개헌성사를 위해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개헌성사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해 교섭단체 간 TV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기본권, 지방분권 비롯한 나머지 헌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공통분모를 갖고 단일안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단일안을 마련하면 민주당, 한국당과 각각 협의해서 쟁점을 압축하고 (이후) 개헌 정치협상 회의가 짧은 시간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광역·기초의원 후보 확정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16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명이 지원했고 지원자 모두 자격심사 3대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시당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신청자 11명의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강력범죄, 음주운전 등 자격심사 3대 기준을 적용해 적격 여부 및 도덕성을 집중 심사했다. 바른미래당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3대 기준으로 성범죄·강력범죄·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등을 적용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

여야 지도부, 세월호 추도식 집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지도부는 16일 세월호 추도식 4주기를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민주당 추미에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기습에 세월호 추모배지를 단 여야 지도부는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특히 추 대표와 이 대표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추도식 마지막 순서로 합동 분향소에서 추도식 분무대로 옮겨진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서 헌화와 분향 의식을 거행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추도식에 불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안산 지역 의원들은 참여했다”며 “저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입장 발표를 했고, 오늘 국회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민주당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과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추도식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전, 서울시장 광장에 세월호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추모석을 놓았다. 기억해야 반복되지 않는다. 국가의 의무가 지켜지고 시민의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썼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날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제 살 공리만 하면서 도망치던 선장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다시는 국민이 안전을 위협받고 희생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는 글을 남겼다.

우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던 날 분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손을 들어 화답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한 대한민국, 서울을 만들겠다.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원불교 서울교당을 방문한 뒤 바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조문 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병하 유족 “우리가족 품비박산 날 때 이용섭은 전두환 청와대 비서실 근무”

박남선 등 5·18인사들 “전두환 비서 광주시장 출마 안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으로 불린 고(故) 안병하 경무관(5·18 당시 전남도경국장)의 유족이 1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 나선 이용섭(68) 예비후보를 공개비판하고 나섰다.

안 경무관의 아들 호재씨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정권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 근무(1986~1987년) 논란에 대해 이 후보가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명령을 받고 간 것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기사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며 “이 후보와 달리 저희 아버지는 전두환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재씨는 5·18 당시 전남도경 국장으로서 신군부의 발표명령을 거부해 보안사에 끌려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부친 안 경무관의 삶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전두환 집권기 모든 공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숨죽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한 것이다. 호재씨는 그러면서 “광주가 고향이 아닌 저희 아버지 같은 공직자들이 광주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광주를 외면하고 싶었던 사람이 광주시장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조심스럽지만 광주 정신을 대표하는 광주시장 후보로 강기정씨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씨와 시민군 방송을 맡았던 박영순씨 등 5·18관련 인사 10여명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 신군부하에 사정비서(행정관)로 근무하고 훈장까지 받았던 인물이 광주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 ‘공무원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